

第294回國會 (定期會) **일자리만들기特別委員會會議錄** 第 6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0年12月2日(木)

場 所 企劃財政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사회적 협약안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일자리 창출 정부대책 추진현황 보고
 - 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일자리관련 대책보고(기획재정부)
 - 나. 2020 국가고용전략 등 일자리관련 대책보고(고용노동부)
 - 다. 기타 일자리관련 대책보고

審査된案件

- 1. 사회적 협약안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 1
- 2. 일자리 창출 정부대책 추진현황 보고 2
 - 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일자리관련 대책보고(기획재정부)
 - 나. 2020 국가고용전략 등 일자리관련 대책보고(고용노동부)
 - 다. 기타 일자리관련 대책보고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종걸 성원이 됐으므로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오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님 그리고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상임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결위가 아주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특위도 의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신속하게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적 협약안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이종걸 의사일정 제1항 사회적 협약안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년 2월 구성했습니다. 수차례 걸쳐서 기획재정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19개 정부기관으로부터 일자리 관련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전개했습니다.

기업 현장 시찰을 했고,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초에는 청년일자리 육성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이 함께 해야 할 그래서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결론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의지와 뜻을 결집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약안을 채택하는 게 좋겠다, 채택을 함으로써 더욱 실천력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민적 공감대를 위한 원칙, 방안 그리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사회적 협약안작성 기초소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같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약안작성 기초소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시20분)

○김성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종걸 예.

○김성식 위원 김성식 위원입니다.

어쨌든 소위원회가 설치돼서 작업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높여 나가는 작업을 일자리 특위가 하는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사회적 협약안 이러면 보통 노사정 뭐 노동부가 그동안 주로 주관해 왔던 노사정에서 노동 시장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사회적 합의 이렇게 사회적 협약 그렇게 좁게 해석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붙이고자 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대기업·중소기업 문제라든가 아니면 거시정책에서 보다 고용 창출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많은 사실은 이슈들이 있고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의 설 때 노동 시장 부분에 있어서의 통상해 왔던 사회적 협약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하시되 이것이 꼭 종래의 의미에서의 좁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하던 그런 사회적 협약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높이는 그런 초안의 의미로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예.

이전에도 이런 작고 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일자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 김성식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우선 우리 경제 전반에 관한 문제들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이론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각계의 층에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내놔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약안작성 기초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뜻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 활동의 구체적 내용은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 간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걸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 창출 정부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 창출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현장에서 직접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 정부대책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2020 국가고용전략 등 일자리 관련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장님, 그리고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 정책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고용상황도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경제회복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늘리는 한편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나아져도 예전처럼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빈곤층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정부는 2020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여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10월 14일에는 후속 대책의 하나로 청년고용 대책을 담은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도 일차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희망을 되찾고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은 정책수행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

- 2. 일자리 창출 정부대책 추진현황 보고
 - 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일자리관련 대책 보고(기획재정부)
 - 나. 2020 국가고용전략 등 일자리관련 대책보고(고용노동부)
 - 다. 기타 일자리관련 대책보고

정책의 입법과 재원 마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이재홍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입니다.

정지원 직업능력정책관 직무대리입니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입니다.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시면 최근 주요 고용정책을 고용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엄현택** 고용정책실장 엄현택입니다.

최근 주요 고용정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요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고용동향 및 전망입니다.

1쪽입니다.

최근의 고용상황은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연평균 30만 명 내외의 취업자 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고용구조도 일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표상의 고용여건 회복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실업은 연초보다 개선되고는 있지만 체감하는 고용사정의 애로는 지속되고 있어서 청년실업률이 금년 1월에 9.3%가 금년 10월에 7.0%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고용사정의 애로는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민간부문 중심으로 고용여건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지만 일자리 증가 규모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쪽입니다.

내년 고용정책 방향입니다.

고용상황이 호전됨에도 여전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고용상황 호전에 따라서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는 다소 축소하되 청년·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정일자리 사업 가이드라인에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을 설정해서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의 경우 청년아카데미 등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일터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여성의 경우 육아기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연장을 하고 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공공부문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용의무 사업주 이행상황을 공표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근로빈곤층의 경우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금년에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입니다.

고용센터 상설채용관화 등 공공 고용서비스를 확충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육성을 위해서 현행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개인 수요에 기반한 내일배움카드제를 확충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에 대한 예산도 과감히 증액해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가고용전략 2020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먼저 보고드리면, 경기회복에 따라서 일자리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상당수 국민은 지표상의 호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고용창출은 둔화되고 분배상황도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 구간은 고

용이 개선됨에 따라 분배도 개선되는 반면에 (3) 구간은 고용률이 담보하는 가운데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림이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필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성장과 고용이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가고용전략의 비전은 '내 일로 행복한 나라'로 삼고 이를 위해서 고용률을 현재 09년도 62.9%에서 2020년까지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24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하에 4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이 고용을 견인하는 고용친화적 경제·산업 정책을 전략 1로 삼고, 고용을 통한 분배 개선으로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정하고 역동적인 일터를 조성하는 것을 전략 2로 삼았습니다. 취약인력 활용과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해서 성장을 추진하는 전략 3과 또한 근로유인형 복지체제로 고용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아울러 가져가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가고용전략의 내용이 방대하나 이를 일자리 희망 5대 과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지역과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지역과 관련해서는 지역 일자리 공시제를 본격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244개 자치단체 중에 211개 자치단체가 이 공시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미래 희망 일자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년도에는 1000개소의 사회적 기업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우수 100대 기업을 매년 선정·발표합니다. 올해의 경우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주요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관 합동의 일자리협의체도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고용확대형 재정·산업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조세·조달·산업·금융 제 분야에 있어서 고용친화적인 정책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내 및 건설 하도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의 실태를 점검해서 불법 파견은 의법 조치하고 원청기업의 직접 고용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년도에 만드는 등 종합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방안도 이달 중에 마련·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근로자의 기본권익 보장을 위해서 서면근로계약 정착,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를 3대 고용질서로 설정해서 보장하고자 합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해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적용을 통해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마무리하고 아울러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과 휴가를 상호 대체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고용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시장수요와 노사의 견을 수렴해서 파견허용 업종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업종·규모별 실태 등을 반영해서 조정하는 작업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일·가정 양립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부문부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하고 민간부문의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칭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을 내년도에 제정·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문컨설팅도 지원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늘어난 고용인원에 대해서 소요비용 일부도 지원하고 특히 인력 부족 분야의 경우는 상용형 시간제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유휴간호사 9만 명 또 빈 일자리 2만 3000개를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내하고자 합니다. 육아휴직과 연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생애 이모작 촉진입니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연장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확산하되 특히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은퇴를 전후한 고령자의 전직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직지원 장려금제도를 개선하고 70세까지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서 고령자 명칭을 장년층으로 하고 연령대는 50세 이상으로 확대·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년제도 개편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 및 사회공헌 등 선택기회를 확대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고령자 특성별로 재취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지식과 경험을 갖춘 퇴직전문인력에 적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도 발굴·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해서 '내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28만 명을 대상으로 탈수급과 집중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입니다.

상담과 훈련·취업알선에 이르는 패키지형 취업지원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고용전략 2020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한 가지 첨언 드릴 것은, 지난 G20에 참석했던 ILO 사무총장이 후안 소마비아인데 국가고용전략 2020에 대해서 거시경제 정책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에 권유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가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13쪽 청년 내 일 만들기입니다.

먼저 청년 고용 실태를 보고 드리면, 청년실업률은 작년 10월에 7.5%에서 금년 10월 7.0%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고용률은 39.5%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고 취업준비자가 37만 명에 이르는 등 청년층의 체감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별로 나쁜 편은 아니지만 고용률은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이상 학력자가 전체 청년 실업자의 3분의 2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대졸자는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계속 준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이처럼 청년 고용이 문제가 되는 원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격한 고학력화로 전문대졸·대졸 청년층이 초과공급된 상태에 있다는 점, 그리고 청년층이 근로조건 격차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한다는 점, 그리고 산업 고도화 또 인력절감형 투자 등의 영향으로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가 약화돼서 취업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 또 기업에서 신규 직원보다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서 청년 고용이 악화되고 이렇게 복합적인 원인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2년 말까지 청년 일자리를 7만 1000개 이상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의 창조적 도전을 지원하고 또 공공기관의 선제적 증원, 또 안전·특허·생활서비스 일자리 확대, 인턴과 안정적 일자리 연계 강화, 해외취업 활성화 등을 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대·중소기업 그리고 세대 간 상생기반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 대·중소기업 간 인재육성 파트너십을 확립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월·화에 걸쳐서 전경련이 주관하는 대기업·협력업체 공동채용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세대 간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는 재직자 직업훈련 또 실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기는 빈 일자리에 청년이 채용되도록 하는 운동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산업수요에 맞는 일 잘하는 청년 일꾼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이 취업책임을 다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업계 관점에서 대학을 평가하고자 하며 대학의 취업률 공개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주도의 이론교육과 실습훈련, 인턴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교 졸업만으로도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진로지도·현장훈련을 연계 강화하는 취업일꾼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졸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고졸 취업자의 입영 연기와 산업기능요원제도 연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을 건강한 직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업사관학교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청년 내 일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폴 텍스트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장관 보고하실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대통령 주재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임종룡 제1차관께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일자리 관련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장님, 그리고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여전히 큰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고용동향 및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올해 초 고용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국회 일자리특위가 구성되어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덕택에 최근 고용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자리특위에서는 청년일자리 대국민 토론회, 지역일자리창출포럼 결성 등 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는 고용위기에 대처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해 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과 근본적인 고용창출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달 대통령 주재하에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해서 교육·노동·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의 대책을 발표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전반적인 경기회복 흐름에 힘입어서 최근 고용시장 여건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 명을 넘는 등 고용회복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고용시장 전반적으로는 서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고용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청년 인턴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단기 대책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개선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서비스업 규제 완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서 일자리를 대폭 늘려나가는 한편 녹색성장 등 신성장 산업 육성, 기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등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의 지원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은 경제운영의 최종적인 성과물이며 그리고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특히 서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고 성장에 따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일자리 대책은 차관보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호인 차관보입니다.

이석준 정책조정국장입니다.

임해중 공공정책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차관보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입니다.

최근 고용동향과 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고용노동부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고용동향 및 전망, 일자리 창출 정책 기본방향, 단기적 일자리 대책, 그리고 고용 창출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대책,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최근 고용동향은 작년의 고용부진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고용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작년에 감소했던 취업자는 금년 들어 공공부문 취업자는 6월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민간부문 취업자를 중심으로 2/4분기 이후 증가 폭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40만 명 이상의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도 수출·내수 등 경기 개선에 따라 제조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도 상승하여 고용의 질은 전반적으로 제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자 증가세에 따라 고용률이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1/4분기에 4.7%로 다소 상승하였지만 2/4분기 이후 3%대 중반 이하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률도 동반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고용여건의 개선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 하락은 취업 눈높이 상승 등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중·고교생 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도 고용 개선세는 지속될 전망이지만 위기 이전의 고용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망입니다.

금년에는 경기회복,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등 정부 대책 등에 힘입어서 고용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경기회복 흐름을 고려하면 민간부문 중심의 고용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이 금년과 유사한 규모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취업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민간부문 취업자는 수출과 내수의 개선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고, 증가 폭은 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금년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고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이 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용여건 유지를 위해서는 연간 25만에서 3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만 위기의 영향으로 약 30~40만 개의 일자리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용률이 위기 이전 수준에 미달하고 체감 고용여건도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자리 창출 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고용안정을 국가 경제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단기 일자리 대책과 구조적 고용 창출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단기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 제고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신성장동력 육성 등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

성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고용친화적인 세제개편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학연계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 추진을 통해서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미스매치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유연 안정성을 제고하는 등 노동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취업지원 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단기적 일자리 대책입니다.

노동부 보고 일자리 사업 추진방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 골조만 말씀드리면, 정부는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간접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이 민간부문 일자리에 원활히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해서 직접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및 고용장려금 제도 등을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직접 일자리 창출은 취약계층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정부 직접 일자리 창출 규모는 금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있어서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훈련을 확대하고 부처별로 분산·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 사업을 통합하여 직업훈련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용서비스 및 고용장려금에 있어서는 고용서비스는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유사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한편 장려금 지원 이후 기업의 고용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요건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고용 창출력 제고를 위한 구조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산업 선진화입니다.

그동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규제완화, 경쟁촉진 등 총 5차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선진국에 비해 고용 비중이 낮은 업종 중 고용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5개 분야 유망 서비스업을 선

정하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콘텐츠·미디어, 사회서비스, 관광·레저, 교육 등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속적인 과제를 발굴해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유망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추진을 위한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보면 우선 해외환자 유치·알선 허용,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외환자 수가 2007년에 7900명에 이르던 것이 작년에는 6만 명을 초과하는 숫자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대상이 되는 서비스 업종을 R&D 사업 지원의 24개 업종에서 50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10개 세제지원 대상에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는 등 지원 대상에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 사업의 규제 완화,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중국인 비자절차 간소화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작년 780만 명에서 올해는 8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의료·교육 분야 등의 입법처리 지연과 이해관계자의 반대 등으로 핵심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추진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자구역 내 외국 교육·의료 기관 유치 관련 법률의 경우 공공성의 저해 우려 등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주요 쟁점에 대한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 등으로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간의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대한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료·교육 분야 및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설득과 관련 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서비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고 고용창출 효과 등이 높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신성장동력 육성 추진 실적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3대 분야 17개 산업을 발굴하고 구체

적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확정된 바 있습니다.

신성장동력 산업의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R&D, 금융, 규제개혁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R&D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 확대와 함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민간투자를 통한 신성장 분야 기술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신성장동력 펀드를 조성·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총 7개 펀드에서 8600억 원을 조성하여 LED·바이오 관련 업체 등 12개사에 1680억 원을 투자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 분야에서도 신성장동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혁 등 제도 합리화를 위한 민간투자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성장동력을 위한 정책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분야입니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실패기업의 재도전장벽을 제거해 왔습니다.

창업기업 전용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 감면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도전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벤처기업 CEO의 연대보증 채무 부담 경감 등으로 실패에 따른 부담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왔습니다.

중소기업 R&D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중기 전용 R&D 자금 지원은 2009년도 4900억 수준에서 내년도에는 6300억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월드클래스 기업 300개 육성과 중소기업 졸업기업 부담 완화 등의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 전략도 금년 3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후속조치

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별 동반성장지수 개발 등 동반성장 이행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망·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원방식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기업활동의 제 분야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창업에서 기업경영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기업환경 개선노력은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선진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중점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등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 강화로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 친화적 세계개편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몇 가지 부분의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특구·외투기업에 대한 고용인센티브 신설 그리고 국내에 복귀하는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 등 세 가지 법이 고용 친화적 세계개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 법안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도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자세한 법안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 관련 2개 부처 보고를 우선 마치고요.

위원님 질의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2개 기관을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에 답변시간 포함해서 7분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과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소위 구성에 있어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질의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환 위원** 경북 상주 출신 성윤환 위원입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가 최근의 화두 같고 반드시 필요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 진학률이 100%에 가까운 이런 현실에서 모든 청년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게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고용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지난해 82% 정도 됐고 그래서 90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비해서 약 3배 이상 급증을 했기 때문에……

○**성윤환 위원** 희망자 100%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한 18%는 원하지 않은 사람일 테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것은 제가 교육과학기술부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대부분의 희망자들은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대학에 진학을 하는 그런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이른바 구인난과 구직난의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앞으로 4년 동안, 2014년까지는 대학 등을 졸업한 청년 구직자의 숫자가 정년에도달해서 퇴직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100% 취업은 한계가 있다는 전망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앞으로 3, 4년 동안 정부가 청년 취업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14년 이후에는 청년 구직자의 절대 숫자는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4년 동안은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1차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1차 프로젝트는 해마다 우리나라가 만들어 낼 수……

○**성윤환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만들어 낼 수 있는 25만 내지 30만 개의 일자리에 덧붙여서 추가로 7만 1000개를 특별히 청년을 위해서 공급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윤환 위원** 대졸자들의 실질적 취업률, 그러니까 희망하는 일자리에 가는 취업률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것은 사실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동안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각 대학별로 집계돼서 발표가 되어 왔었는데 그것이 실제 고용유지율이라 그럴까요, 상당 기간 유지가 되는 것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건강보험 DB, 교과부 자료에 의해서 집계를 하고 저희도 고용보험 DB에 의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4대 보험에 집계되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그런 고용유지율로 본다면 실제 대학들이 발표한 취업률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고, 그러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또 어느 정도는 눈높이를 낮추든지 어찌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약 18개월 정도의 구직기간을 거쳐서 취업은 상당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60% 이상이 취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윤환 위원**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교육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성윤환 위원** 독일식 직업학교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고등전문학교 제도라든지, 지금 현재의 대학교육 시스템, 교육 시스템을 두고는 대학 졸업자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교육부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들 정부에서 TF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용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만드는 TF가 있고 교과부가 주관하는 지금

말씀하신 인력양성 체계 자체에서 TF가 있습니다. 둘 다 총리실 산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과부가 주관하는 이런 TF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인력양성 체계 전반에 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직업학교 등은 잘 아시는 대로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같은 것은 정부가 적극 육성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환 위원 우리 국민들의 수명이 연장되고 또 고령자들의 건강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자면 임금과 근로시간을 감축해서 일자리를 나눌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성윤환 위원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보고드린 고용전략에 보시면 근로시간 단축형으로 저희들이 주된 근무지에서 더 일을 하는 경우에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정년을 연장할 거냐 또는 정년을 폐지할 거냐 하는 선택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차기에 공론화를 하겠다고 오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윤환 위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처우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걸 빨리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 1년 연봉이 평균 7000만원이 넘어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중소기업에 가면 3000만 원 받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정해 나가시겠습니까?

이거 해소 없이는 청년실업률 높은 것,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임금의 격차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여러 가지 수급 상황 등등, 생산성 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조정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든지 시간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면 금지하고 줄여나가는 그런 여러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임금도 임금이지만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근무환경 자체가 좀 개선이 되고 깨끗해지고 쾌적해지고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설 수 있는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방면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윤환 위원 우리 현대자동차의 실질 임금이 토요타의 4, 5배 정도 된다고 제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임금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세계화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이거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특정 기업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 근로자들 가운데서 대기업의 정규직으로서 또 노조에 가입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그 반대의 경우가 일종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는 좀 넘치는 과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취약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넘치는 것은 좀 자르고 모자라는 쪽은 채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성윤환 위원 그런데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말씀보다는 하여튼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균형과 공정, 뭐 이런 개념 등이 도입이 되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등의 차이 자체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걸 성윤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민주당 최영희 위원입니다.

2020 고용전략, 정부가 마련한 2020 고용전략에 대해서 불법 파견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유연화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좋은 일자리마저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서 저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불법 파견의 대표적 사례인 현대차에 대해서 사실 정부는 수년간 방치를 했습니다. 법을 지키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체포·구속만 주장하는 정부의 대응 방식, 특히 고용노동부장관님 이런 발언 하셨지요? “오늘 당장 점거농성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하셨는데 그 뒤로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과연 조정과 중재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이게 옳은 역할인가 한번 묻고 싶고요.

현대차의 불법 파견에 대해서는 수년간 직무유기를 보여온 것이 노동부의 역할이었습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의 파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불법을 선언하고 사법 처리를 주장하는 것이 편파적인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라도 7, 80년대에 노동탄압부라고 비판을 받았던 노동부 그런 역할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뢰가 떨어지면 조정이나 또 특히 오늘 여기서 사회적 합의 얘기를 했는데 이 사회적 합의를 누가 중심이 되겠습니까? 국회가 하지만, 국회가 하겠다고 나서지만 사실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답변 드릴까요?

○**최영희 위원** 아니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너무 많은 걸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하는 데만 해도 한 10분 가까이……

○**최영희 위원** 아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장관님은,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은 불법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비정규직 파업이 아니고요.

제가 규정한 대로 현대자동차 사내 하도급 업체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집단행동입니다.

파업이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당연히 불법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은 불법 파견입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사항입니다. 122개……

○**최영희 위원** 대법원 판결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인정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도 불법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대법원 판결은 2005년 사례의 2명의 근로자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한 상황이고……

○**최영희 위원** 저는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직 확정 판결이 되지 않은 것이고요.

지금 현대자동차에는 122개의 사내 하도급 업체가 있습니다. 8200명의 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 8200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불법파견이나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최영희 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조건에 있는 노동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최영희 위원** 그 실태조사는 회사 측에서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회사에서는 수용했습니다만 노조 측에서 거부를 해서 양측 주장을 균형 있게 들어봐야 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불법 파업의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불법 파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파업이 아닙니다. 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 점거가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것은요, 이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 논의를 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는데,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을 한다면 현대자동차하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교섭을 요구했었고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지금 쟁의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사실상.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대법원의……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말꼬리 잡고, 아니면 말장난으로 비취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 식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오랫동안—지금 15일이 넘게—이 쟁의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생명을 걸고 한나라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또 분신자살도 있었고—다행히 생명을 건졌습니다마는—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는데 적어도 지금 사측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교섭을 하고 싶어도 어찌 보면 정부나 또 다른 업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도 못 하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부가……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용어를 정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위원님, 이게 교섭 대상이 아니고요, 교섭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로서의 현대자동차……

○**최영희 위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지요, 그것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영희 위원** 그것은 중노위에서 그렇게 판정을 내린 거지요,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대법원도 어제같이……

○**최영희 위원** 그런데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노동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쪽에만 치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건을 더 키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위원님, 이렇게 입장이 바뀔 때 최종 판정은 대법원이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대법원이 내리는데요, 지금 다시 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파기 환송을 했는데 지난 11월 15일 날…… 아니야.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11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최영희 위원** 아니요, 다시 읽습니다.

11월 12일 날 서울고법에서 다른 사건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의 현대자동차 사건은 한라인이 아니라, 이번의 11월 12일 난 판결은 라인 1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불법이라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대법원 판결을 고법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어떻게든지 이것을 불법으로 몰아서 사측 입장만 옹호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위원님, 백 보를 양보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아직까지 확정 판결은 안 났지만 파기 환송된 그것을……

○**최영희 위원**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지요.

7월 22일 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이 나기 전 1심과 2심에서는 동 사건에 대해서 적법 하도급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적법 하도급으로 법원이 판결 내린 사안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기가 곤란했지요. 7월 22일 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이 있고 나서 곧바로 저희가 실태점검방침을 밝혔습니다, 비록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지만. 이 판결은 2명의 근로자에 대해서 2005년 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122개 사내 하도급 업체 모두를 한번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노사 양측의 의견을 8월 중에 듣고 9월 6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

○**최영희 위원** 그 실태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시다. 그 실태조사 영터리로 한 것도 저도 할 말이 많은데요.

우선은 지금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무시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회사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해서 똑같은 조건에 있는 데를 내놓아라 하는, 자료를 내놓아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위원님, 그것은 저희 실태점검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 혼재 작업을 하느냐 분리 작업을 하느냐, 작업 지휘를 누가 하느냐, 작업 배치 결정은 누가 하느냐, 근태 관리는 누가 하느냐, 하청의 독립 실체성은 있는 것이냐 등 제시한 기준을 충실히 따라 가지고 25개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들

어서 그중의 네 군데에는 불법 파견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지요. 나머지는…… 29개 중 네 군데 사업장은 점검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사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희가 25개 사업장에 대해서 21개 사업장은 적법이고 네 군데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서 불충분하다, 이의가 있다 하는 증거가 있어서 노조나 사측이든지 어디든지 저희들한테 제기를 해 주시면 정밀 재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엉터리로 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 그러시는데 증거를 사실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그래서 저희들도 현대자동차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해 보겠다 해서 122개 하청업체 전부 다를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법원의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가운데 이와 같이 주요 생산시설을 무단으로 불법 점거해서 공장이 못 돌아가게 하고 국민경제와 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우선 공장이 돌아가도록 하면서 교섭은 아니지만 대화를 하자,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최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윤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용 위원** 서울 강동을의 윤석용입니다.

보고는 잘 들었는데 늘 환상적입니다. 좀 현실에 맞는 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용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늘 거론되는데 장애인 고용부담이 지금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도상 문제가 있든지 인식에 문제가 있든지 이런데 장애인 고용을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저희가 그저께 국무회의에서도 공공 부문 장애인 고용실태와 개선 방안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매년 장애인 고용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금년에만 하더라도 10개월 동안 장애인 채용이 증가한 실적이 지난해 1년 동안 채용이 증가한 실적을 능가하고 있을 정도로 조금씩 개선

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대책은 역시 지금 부과금 등을 부과하는 것보다도 장애인 고용실태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 일종의 경쟁자의 압력효과라든지 또 홍보효과 등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윤석용 위원** 그것을 공개를 좀 빨리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지금 공개의 기준을 매년 점차 상향 조정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윤석용 위원** 그렇게 하세요.

민간 기업 중에 대기업은 거의 전무하고 특히 모범을 보여야 될 공공기관조차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의무 고용률 채우기도 급급하고 특히 힘 있는 부서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을 좀 조율해 주시고.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법원이라든지 교육 분야라든지 채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조건이 있는 곳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약조건들을 저희가 상당히 제거를 하고 장애인들께서 많이 교육·법원 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윤석용 위원** 그렇지요. 장애 특성에 맞게 할 수가 있는 업종이 많습니다. 그 분야도……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금융, 이런 쪽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윤석용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에 부담기 초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지금 개선방안 등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고.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윤석용 위원** 그리고 고용부담금을 부담했을 때 제재수단이 있습니까, 돈 안 냈을 때? 이게 미납액이 자꾸 증가하는데. 그 개선안도……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 부분은 체납을 하여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윤석용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기본적으로는 끝까지

하여튼 저희들이 추적해서 받아들이되……

○**윤석용 위원** 말로 끝까지지, 잘 받아들여야 말이지. 안 내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현재 실제로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그것을 못 내고 도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윤석용 위원** 내년에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장애인 행정 도우미를 두도록 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게 아마 행안부 쪽에서……

○**윤석용 위원** 예, 그것은 참 잘 되고 있는데 그게 장애인 행정 도우미하고 일반 행정 도우미가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명절 휴가비조차 서로 차별을 하고, 임금도 사실 일반 행정 도우미도 월평균 71만 9000 원이라던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기재부 쪽에서도 이 점 좀 숙지해 주셔 가지고 차별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데 불평등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윤석용 위원**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 사회 통합과 사회 참여입니다. 그 길을 가는 데는 장애인 체육이 우선입니다. 체육을 통해서 사회 참여와 자기 재활과 자립을 할 수가 있는데 체육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체육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잘 양성이 안 되고 배치가 안 됩니다. 이 점도 물론 문체부 소관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점을…… 일자리 창출위에서 좀 마련해 주시고, 기재부에서도 이런 것을 예산 할 때 좀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게, 구직을 단념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구직 단념자와 취업 준비자가 올해 좀 늘었습니다.

○**윤석용 위원** 올해 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통계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우리나라

라는 청년 고용률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통계가 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15세부터 29세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런데 선진국은 24세로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24세까지 잡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우리나라 취업률 통계, 두 가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률을 잡을 때 선진국은 65세까지 잡습시다마는 우리는 평생, 그러니까 100세 이상까지도 다 밑의 분모에 잡힙니다.

따라서 고용률이 좀 저평가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아직까지 선진국……

○**윤석용 위원** 그러면 통계를 내려면 외국하고 기준이 똑같아야 되겠네요, 나이도?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지요. 그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통계를 내는 목적이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트렌드를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통계만 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는 관점이 더 우세해져 가지고……

○**윤석용 위원** 그런데 고용률이나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을 따질 때는 고용이 나라별로 나이가……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것은요, 국제 비교될 수 있게……

○**윤석용 위원** 열다섯 살부터 스물네 살까지 나라가 거의 같아야 안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니, 국제 비교를 할 수 있는 통계를 또 만들고요.

그러나 정책적 유의성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24세까지는 대부분 대학생 아니면 군대가 있는데 그 15세에서 24세까지 고용률이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하는 것 가지고 정책 수단을 삼으면 문제가 있다는……

○**윤석용 위원** 외국도 마찬가지로 군대 가는 나라, 징집하는 나라도 있고, 대학교도 그 나이에 다 안 가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러나 우리의 입직 연령—첫 직장을 갖는 연령—이 선진국보다 5, 6년 늦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윤석용 위원** 그러나 우리 교육제도라든지 환

경에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이것을 수많은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이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 내린 것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한 거거든요.

○**윤석용 위원** 그러니까 통계가 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계 기준을 일률적으로 좀 같게 해요. 외국 선진국은 선진국……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우리 2개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고드릴 대로……

○**윤석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또 같이 나와…… 우리나라는 청년 고용률이 40.5%, 외국 선진국하고 늘 같다, 비슷하다. 고용률이 같다고 해 놓고 우리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윤석용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받아온 통계도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여기 오늘 보고드릴 자료에 보면 둘 다 들어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조차도…… 정부는 괜히 우리는 고용을 많이 한다고 위안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청년 실업이 심각하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위원님 지적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고용률은 우리가 좀 저평가되도록 기준이 되어 있고……

○**윤석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청년 실업률은 마치 고평가되는 것처럼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기업가 육성도 사실은 현실이 아까 말씀드린…… 군대 가고 전부 다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때 청년 기업가는요, 꼭 24세까지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30대 초반까지도 저희들이 실제로는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용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윤석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김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九 委員** 기재부 차관님, 지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그런데 저는 이게 상당히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에 이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런데 그전에 보면 임시투자세액이 1조 5000억 원인가 예산을 계획했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세수 감소가 약 2조 원 정도 됩니다.

○**金容九 委員** 그래서 그전에 한번 보니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5000억을 잡았더라고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것은 추론이기는 합니다.

○**金容九 委員** 나머지는 재정 건전성 때문에 그리 돌리고.

그런데 이 고용창출투자가 그 내용의 기본이 뭐냐 하면 시설 투자를 해야 이게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창출을 제일 많이 하는 산업이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이 무슨 시설 투자를 그렇게 하는 업종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金容九 委員**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것을 명목상 고용창출투자세액이다 하지 실질적으로 실효가 있겠느냐? 상당히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중소기업 고용창출지원금을 오히려 증액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대신해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있는데 사람을 못 구하거든요.

그런데 어제인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74%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아까 성윤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다가 나중에 안 되면 중소기업이라도 가 보는데 가면 너무 허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는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조건도 물론 있지만 제일 큰 게 그거거든요, 임금의 격차. 그러니까 이것 차라리 노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오히려 대기업에 갈 수 있는 거기에 자꾸 치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투자…… 고용창출투자세액은 이것 다시 한번 검토

해 보세요. 이게 실효성을 못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중소기업 지원금을 좀더 과감하게 해 가지고, 역시 중소기업에 가도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얼마 안 되더라 그래 가지고 보람을 느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한번 이것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金容九 委員**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줄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보면 사업 수는 직접일자리 창출 79개, 직업능력개발 25개, 고용서비스 25개, 고용장려금 12개, 창업지원 6개, 실업급여 4개 등 150개로 이는 금년도 202개에 비해 가지고 쉼하나가 줄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을 자꾸 이런…… 명분상 고용창출투자세액 이런 걸 만들면서 내용적으로는 예산을 줄이고, 사업도 51개나 금년도보다 줄이니 결국은 이게 뭔가…… 말로만 하는 것이지 뒷받침이 안 된다, 어떻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답변 드릴까요?

○**金容九 委員**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첫 번째로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는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라는 것은 고용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고용 측면에서 보자면 기계설비만 투자하면 투자액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투자라는 것이 대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자동화 설비라든가, 즉 사람을 덜 쓰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인적자본, 즉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는 적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고용 측면하고 연계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계투자뿐만 아니라, 고용을 늘리는 경우에만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게끔 설계돼 있는 제도가 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지원이 줄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 수가 준 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중복되거나 이런 일자리를 다 통합을 했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만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통합을 해서 중복을 피하고, 그다음에 비효율을 줄이고 한 것 때문에 사업 수는 줄었고요. 예산액 자체는 약 한 8조 8000억으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다만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하는 단기적이고 우리가 위기 때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이 이번에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그 사업이 줄기 때문에 액수 자체는 많이 늘지 않았습디다마는 그 사업을 제외시킨다면 전체적인 예산 지원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런데 중복된 것을 정리하려고, 그것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예산을 보면 말이지요. 2010년도에 8조 8900억인데 금년 예산이 8조 8000억으로 848억이 줄었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라고 지역에서 단기적인 일자리사업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엔 10만 명을 했었습니다. 10만 명을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단기적인 일자리사업이라서 저희가 급하고 한시적으로 했습니다만 이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서 준예산이 한 3000억이 좀 넘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이 준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예산수준이 한 몇백억 차이 나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그 요인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리고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金容九 委員** 제가 개괄적인 것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金容九 委員** 지금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金容九 委員** 그런데 그 특별법이 물론 강제규정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인원의 100분의 3인가를 매년 하게 돼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3%…… 그렇습니다.

노력하도록……

○**金容九 委員** 그런데 이게 전혀 없는 데도 있어요. 전혀 안 한 데도 있고 전부 미달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평균적으로 보시면 3%를 초과했고요, 공공부문이. 그런데 공공기관의 40% 정도가 3% 고용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1명도 채용 안 한 그런 기관도 있고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2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공공부문도 채용규모가 좀 줄었다 하는 점, 두 번째는 공공기관 선진화, 특히 지난 수년 동안 공공부문의 인력이 한 30% 이상 급증했기 때문에 그것을 균살을 빼는 차원에서 선진화 노력 때문에, 구조조정 영향으로 신규 인력의 채용이 좀 어려웠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마는 금년도에는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지금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은 전체 정원의 3% 이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청년을 채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金容九 委員**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김용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정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근 위원** 장관님, 1인 창조기업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들어 본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정태근 위원** 그런데 역점사업인데 보면 내 일자리 프로젝트에도 이 1인 창조기업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들……

○**정태근 위원** 지금 같이……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정태근 위원** 지금 1인 창조기업이 대략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20만 한 300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경제인구의 한 1%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청년인턴, 우리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에 들어가는 돈이 올해 한 360억 늘어 가지고 3만 개…… 3만 3000개 만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1인 창조기업이라는 게 새로운, 지금 우리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노동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억압을 받는 노동은 안 하지만 암만 힘들어도 자기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의욕이 있는 일들은 한단 말이지요. 그런 대표적인 노동의 유형이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젊은 사람들한테는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이고 40·50대들한테는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 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임 차관님 말씀 좀 잘 들어주세요.

제가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을 제정·발의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통과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수정이 됐거든요. 그중에 한 가지가 1인 창조기업 육성 진흥원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차원에서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의견을 냈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력을 늘렸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제가 구체적인 건…… 그걸 늘렸는지는 잘……

○**정태근 위원** 저희가 기재부에 확인해 보니까 기정원에다가, 그러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인력을 한 12명을 늘리고 그중에 한 4명 정도를 배당하겠다 얘기하고, 1인 창조기업 육성 진흥에 관한 부분들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진담 조직을 지정하도록 지금 법을 개정할…… 제가 수정해서 일단 통과시켰어요. 왜냐하면 이걸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임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정태근 위원**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농구화를 직접 디자인해 가지고 제작해서 판매하는 1인 기업 있다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제가 듣질 못했습니다.

○**정태근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농구화에다가 예를 들면 한 농구…… 자기가 지지하는 팀의 로고를 붙여서 거기에 있

는 팬클럽 상대로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 습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엠블램(emblem)이나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이런 유형의 것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를 들면 액세서리를 디자인해서 제작해 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1인 기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링만을 갖다 수입해서 거기에 자기가 디자인한 걸 부착시켜서 판매합니다.

예를 들면 타투리스트 얘기 들어 보셨어요? 타투리스트가 뭘지 모르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모릅니다.

○정태근 위원 문신 제작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문신 제작하는 사람 통계가 없어요. 2005년도에 자기가 전문적으로 제작 교육을 받았 다라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2005년 통계로 한 2만 명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 컬러, 까만 것은 3만 원 에서 5만원, 비싼 것은, 컬러로 된 것은 한 7만 원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우리가 흔히…… 제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법률을 발의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면 어플리 케이션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전시회도 했고 거기의 우수 상품도 뽑아 가지고 제가 시상도 했 고 그랬는데, 지금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주 우수하지만 이러한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트렌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건 누가 하느냐? 기본적으로 1인 창조 기업 들을 실제로 만들었고 그 네트워크 속에서 성공 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새로운 자리들을 만들어내 는 겁니다,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중기청장이 우리 전 담 조직 중에서 우리 직원 중에 몇 사람 해 봐 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기존 에 하시던 일이 계속 있고 그 조직에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겨 가야 하는데 이런 1인 창조기 업의 새로운 유형을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기청장한테 그 내용을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해라, 설득이 안 된다 이거예요, 좌

우지간. 다른 유사 조직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 로 이러한 부분들을 새롭게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고 한데, 무조건 공공기관 선진화 차원에서 이 진흥원 만들면 안 된다, 이 게 무슨 정책이냐는 말이에요.

지금 360억을 들여 가지고 3000명 인턴 추가 고용한다고 해서 그 3000명이 실제로 고용될 가 능성이 얼마 있어요? 그 외에 예를 들면 지금 해 외 글로벌 인턴 66억, 해외취업 지원 52억 이렇 게 해 가지고 한 500억 이상 돈을 쓰는데 이런 것 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창의적인 창업 들, 이런 1인 창조기업 같은 부분들을 정말로 제 대로 할 수 있는 진흥원을 만드는 게……

제가 예산 얼마 요청했는지 아세요? 25억 요청 해 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 좋다, 절반만 줘라, 그런데 어쨌든 기재부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안 된다고 하시는 담당자가 1인 창조 기업이라는 게 뭘지 아는지, 1인 창조기업의 트 렌드가 어떻게 가는지를 이해하는지, 적어도 그 런 고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정태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에서 하도 반대 해서 진흥원을 빼고 일단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 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정태근 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법을 통과시켜 서 일단 법이 시행되도록 하고, 제가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전담조직이 실제로 뭘 했느냐를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낼 겁니다.

적어도 기재부에서 그런 조직이 왜 필요한가라 는 것에 반대하려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이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일자리 대책을 말 로, 얘기를 하는데, 그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을 이렇게 갖고자 하는데 그걸 무조건 안 된다고 얘 기하면 안 되지요.

제가 아까 타투리스트 말씀드렸는데 아까 여기 자료에도 보면 의료법 개정이 나와 있는데요. 지 금 우리는 타투가 불법입니다. 문신이 불법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정태근 위원 의료법상에 보면 유사 의료행위 로 해서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보다 문신을 제작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문신을 하나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0불, 단색으로 하는 게 100불, 컬러로 하는 것은 300불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더 큰 시장은 뭐냐 하면 문신을 제거하는 시장이에요. 문신을 하나 제거하는 데 보통 한 750불에서 1500불 들어갑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통계도 없지만 실지로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실지로 의료법도 개정해야 돼요. 그리고 공중위생법을 개정해서 길을 열어 주고, 불과 1mm도 안 들어가는 건데 이것 김춘진 의원님이 안을 내고 있는 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압니다. 하지만 새롭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법상으로도, 조직상으로도 보다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이 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한 답변만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튼 1인 창조기업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또 법 개정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도 열심히 뒷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위원 반대 안 하시면 된단니까요,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아무튼 저희가 열심히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양해해 주신다면 고용부도 잠깐 추가 답변드리면 1인 창조기업은 저도 국정기획수석으로 있을 때 미래기획위원회 안건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오늘 보고드린 청년내일만들기 프로젝트에 보시면 창조, 창작, 고용 기반 확충해서 창조 캠퍼스, 창조 마을 이런 것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2012년까지 4000명을 육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올립니다.

○위원장 이종걸 정태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재완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박준선 위원 오늘 보고를 보니까 고용노동부로 바뀐 다음에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감사합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장관님은 보다 근본적인……

장관님, 청와대에서 근무하실 때 직책이 뭐였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렇지요. 국정 기획을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박준선 위원 그러니까 노동부 공무원들 훌륭하고 열심히 다 잘하니까 장관이라는 자리는 보다 좀 큰 틀에서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발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유념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워크넷이라는 취업 알선하는 사이트 가동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박준선 위원 잡코리아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박준선 위원 민간 사이트입니다. 그 업체가 매출액이 얼마나 되고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준선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매출액이 한 350억 정도 되고 2009년도 연수익이 154억이에요, 직원 수가 240명이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잡코리아가 잘해서…… 우리가 오늘 일자리 창출 얘기를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적절히 찾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크넷을 가동하는데 그것을 민간 사이트에서 이렇게 수익이 날 정도로 하면 노동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간단하지요. 워크넷이나 이런 것 해서 취업 알선하고 고용 찾아

주는 것, 특히 청년들이나 인터넷 이용해서 하는 그런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워크넷을 잡코리아 수준 이상으로 한다면 잡코리아는 필요 없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서로 역할을 보완하고 또 차별화될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봅니다만, 하여튼 계속 말씀해 주시지요.

○**박준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노동부의 위안이고, 워크넷이든 노동부에서 그런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적인 서비스 돈 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부족하니까 사적인 서비스가 나오고 경찰이 부족하니까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어쩔 수 없는 게 있지만 그것은 공적인 서비스가 부족하니까 결국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워크넷을 비롯해서 취업 알선하는 여러 가지 노동부의 어떤 공조직을 그렇게 활용하고 인터넷이나, 청년들이 노동부에다가 등록 한번 하면 내가 원하는 그런, 내 스펙과 내 모든 것을 등록하면 노동부에서 메시지도 오고 그래서 또 알선을 할 수 있고 면접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이라면 굳이 잡코리아에 돈 내고 할 필요 없지요. 그리고 광고나 이런 것도 그리로 갈 수가 없지요. 워크넷으로 가겠지요.

그것을 유념해서 내년도 노동부 운영하실 때 특히 청년 실업이라는 것은, 지금 많은 일을 하시는데 7% 이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청년 실업이라는 숫자가 제 생각에는 지금 20대, 30대들 자리를 못 잡는 사람들은 평생 헤맨다고 봅니다. 그 자리를 잡게 해 주고, 그다음에 매달 고용 대책을 대통령 주제로 한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글로벌 인재를 만들어야지 그 친구들이 어차피 이 시대가 글로벌 경쟁 시대에 해외 취업, 지금 글로벌 리더 양성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교육부장관 이주호 장관하고 해서 대학 총장들하고 해서 어떻게 대학에서 인재를 키울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여기서 눈높이를 낮춰라 그것은 대학생들한테나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가슴에 와 닿는 소리가 아닙니다.

글로벌한 이런 환경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 줘야 되는데 대학에 가 가지고 전근대적이고 또 약간 후진적인 교육을 받고 나와 가지고 국내에서 취업을 하고 또는 해외에서 취업하려면 스펙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교육에서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중소기업, 그다음에 해외, 호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우리 청년들이 워킹 홀리데이니 각자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대학에서 미리 준비시키고 실제로 실용 영어라는 것을 자유 자재로 쓴다면 사실 취업하는 게 쉽잖아요.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을 교육부장관하고 해서 대학 교육의 어떤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청년 실업은 해결이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특히 힘주어 말씀해 주신 대학 교육의 수요자 눈높이에 맞추는 방향으로의 개혁이랄까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드린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에도 중점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정말 쓸모 있는 그런 좋은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대학 개혁도 추진을 하고 또 저희들이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는 것을 50개 프로그램으로 신설을 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교과부와 일·교육 훈련·자격의 연계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 등도 함께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두에 지적해 주신 워크넷과 민간 고용 서비스 정보망과의 상호 대체 관계냐, 보완 관계냐에 대해서는 어쨌든 뼈아픈 지적이라고 말씀을……

○**박준선 위원**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박재완 장관님께서 고용노동부장관을 하시는 기회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환노위에 2년 있다 왔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청년부터 어르신들까지 일자리 문제, 우리도 해당됩니다. 이제 수명이 80, 90되면 60 넘어서 무슨 일을 할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가장 근본적인 고용 시장의 어떤 경직성, 그다음에 좀 단순한 것, 그래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형태를 법률적인 노동법체 내에서 다양화시키는 것, 이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동계나 여기저기서 다양한 의견도 있고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할 문제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노동 시장이 선진화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박준선 위원** 그게 바로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있습니다. 박재완 장관님께서 장관 하시는 동안 그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일자리특위에서도 사회적 협약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여러 가지 건설적인 논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의 논의를 활성화하면서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점차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수 위원** 기재부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국내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세계 지원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 혜택이 경제자유구역의 외투 기업들한테 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준으로, 외국에서 있다가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우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정희수 위원** 국내 기업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본사 기준입니까, 계열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그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무슨 말인지 알

○**정희수 위원** 그러니까 본사는 한국에 있으면서 글로벌 환경이니까 해외 기업에 많이 계열사를 하는데 그 계열사가 다시 국내에 오면 또 똑같이 이런 혜택을 주느냐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그러니까 기업 단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단위의 개념. 그냥 단순히 사업장이나 지점이 나가 있는 게 들어온다 이것은 아니고요. 기업 단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희수 위원** 기업 단위는 본사 개념이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그렇지요. 나가 있던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기업 단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희수 위원** 아니, 기업 단위라는 것이 본사가 한국에 있는 본사가 아니고 모조리 전부 다

해외, 중국이나 거기에서, 본사가 거기에서 법인 세나 모든 것을 했던 기업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다시 돌아오는.....

○**정희수 위원** 다시 오는 경우.....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현지 법인으로 있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정희수 위원** 그게 좀 헛갈리네. 현지 법인도.....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현지 법인이라는 게 물론 기업 개념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기업 개념.

○**정희수 위원** 계열사.....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 계열사도 해당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계열사라고 자꾸 하시니까 좀 의미가 자꾸 이상해지는데요. 기업 단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업이 본사에 소재지를 중국에 놓고서 중국에서 운영하던 기업이, 본사가 있던 기업이 그다음에 국내로 다시 본사를 옮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지사가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정희수 위원** 아니지요. 지금 글로벌 환경에서..... 차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사는 한국에 있으면서 또 다른 법인을 다 해외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그러니까요. 또 다른 법인이 있는 것은, 그것은 기업의 형태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지 법인의 형태로?

○**정희수 위원** 현지 법인의 형태이니까 그게 왔을 때.....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그게 다시 들어온다 하면.....

○**정희수 위원** 들어오면 혜택을 다 준다 하면 여기에 상당히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 협력 업체, 타 대기업들 경우에 해외에 전부 다 법인 형태로 갈 것 아니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그렇지요. 기업의 형태로 나가는 거지요.

○**정희수 위원** 기업의 형태로 갔다가 그 기업들이 다시 한국에 왔을 때 그것을 3년간 100% 해주고 법인세 이것을 외투 기업하고 똑같이 해 준

다면 이것 상당히 정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수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잘 짚어봐야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저희가 지금 이것은 기획재정부 세법소위에서 이 내용을 포함해서 고용 증진하기 위한 세제 제도 전반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아니, 그런 효과성을 내가 지금 짚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나중에 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보고를 해 주고 여기에 과연 이만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편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부의 재정이 또 그만큼 문제가 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정희수 위원 다른 국내 기업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R&D 투자세액 공제가 있는데 기존 3~6%에서 개정을 했을 때 20%로 대폭 높여 줬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면 여기 R&D 투자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R&D 투자는 원천 기술과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 기술, 이런 중요 기술에 대해서 R&D의 대상이,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R&D를 다 20%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의 원천 기술이라든가 신성장 동력 사업에 필요한 기술, 이런 기술들을 지정해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결국 이렇게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렇지요. R&D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정희수 위원 그 전반적인 그 방향을 내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경쟁력 높이는 데 R&D 이외의 방법이 있겠습니까?

○정희수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 범위가 이렇게 할 때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건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것은 지식……

○정희수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신성장동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순간에 또 새로운 성장동력이 뭔가가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활자화된 그런 쪽으로만 경직적으로 되어 있다 보면 새로운 기술이 훗날 날아다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받아야 할 R&D 투자 이쪽에서는 혜택을 못 받고 그 지난 쪽이 혜택을 받게 되는, 또 여기에서 또 다른 모델 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명확하게 어떤 범위로 그 R&D 투자세액공제를 해 주는 건지, 내가 두 가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모델 해저드 문제가 예방될 수 있는지 그걸 자세하게 서면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R&D에 지금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신성장동력기술 10개 분야 46개 기술을 저희가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경제부라든가 국가과학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필요한 분야를 정확하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기술 18개 분야 45개……

○정희수 위원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요즘 기술융합이 일어나 갔고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그런 융합의 추세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좀더 효과적으로 R&D 투자에 대한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미리 앞서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별도로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고용부장관님, 사실 젊은이들이 중소기업 쪽으로 가는 데 문제가 뭐냐? 사업장

환경이 엄청나게……

한 30초……

열악하단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국근로자들이 그걸 다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정부 차원에서 평가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 줌으로써 우리나라 인력도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옳으신 지적입니다.

○정희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지난달에 지경부하고 중소기업청 그리고 고용노동부 등이 합동으로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전국 다섯 군데 기존의 산업단지를 좀 새로운, 말하자면 청년층, 신세대가 선호하는 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고용부에서도 중소기업 근무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제약이 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흡족해하실 만큼 빠른 속도로 이게 개선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홍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위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위원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이번 청년 내 일자리에서 7만 1000개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중에서 1만 개 이상을 공공 부문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국립대병원의 간호직 등 의료 인력 1200명을 추가로 증원하겠다. 소방방재청에서 내년까지 1150명 증원하겠다. KOTRA에서 100명을 추가 증원하겠다’ 또 ‘가축위생방역본부에서 1000명을 추가로 증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말한 대로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일자리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자리이고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그런데 소방방재청이 최근 5년간 전국 지사를 다 합쳐서 고용한 정규직 인원이 87명입니다. 5년 동안 신규 채용한 전체 숫자가 100명이 안 됩니다. 비정규직을 포함시켜도 5년 동안 채용한 인원이 100명이 되지 않았는데…… 산하기관 다 합쳐도 2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1150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 차관님, 이거 정규직, 안정적인 일자리가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홍희덕 위원 또 증원을 위한 예산 배정도 맞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히 소방이나 안전 이런 분야는 복지 분야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사회적 서비스로서 많이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할 예정입니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가축방역위생본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 정원이 43명인데, 공공기관입니다. 비정규직 인턴 포함해도 200명이 채 안 되는데 내년에 갑자기 1000명의 청년을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계절에만 잠깐 쓰는 임시직이 아니고 안정된 일자리가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계약직으로……

제가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계약직으로 채용되기는 합니다만 안정적인 일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계약직인데, 계약직이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해……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사실상 반복 갱신이 대부분 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가령 2년을 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홍희덕 위원 문제가 없으면 계속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홍희덕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용직이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걸 관계 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아무튼 저는 걱정되는 것이 수년간 그렇게 조금씩 미미하게 채용하던 곳에 이렇게 갑자기 많은 인력을 하는데 걱정이 좀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안정된 일자리인지 이거 부처에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당장 이제…… 오늘이 벌써 12월 2일 아니겠습니까? 한 달 후부터 시행이 되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홍희덕 위원** 구체적으로 청년 내 일자리 프로젝트, 공공부문 고용창출에서 어떠한 기업에서 몇 명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 사업별로 명확하게 세부계획을 우리 일자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11월 달에 만든 세부 실천계획을 제가 손에 쥐고 있는데요.

○**홍희덕 위원** 아, 그거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위원님께 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다행입니다.

그다음은 기재부차관님!

2010년 상반기에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있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런데 8월 말 급작스럽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세제개편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차관님, 본질적으로 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시키고 제도화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이것은 조금 다르지요. 고용증대세액은 고용을 1명씩 늘리면 300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인데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체할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투자를 하는데 현재는 투자액에 대해서 기계설비투자하면 그 금액의 7%를 세액에서 빼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일률적으로 무조건 빼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고용을 늘린 수에 비례해서, 연계해서 이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세액공제제도에다가 고용 증가의 그 개념을 집어넣은 것이지요.

○**홍희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운영되었고 또 일몰법이었으니 이게 연장하기 어려우니까 ‘고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진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오히려 아닙니다. 그것을 정부에서는 빨리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홍희덕 위원** 실제로 기재부에서도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고용한도 조건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기는 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닌 본질적으로 고용창출을 한 설비투자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용을 명목으로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오히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자체가 대기업을 많이 지원하게 되는 지원 제도이고요. 앞으로 이것을 창출, 바뀐다면 역시 고용은 중소기업이 많이 늘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에 조금 더 균형 있게 지원이 되는 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고용증대세액공제 역시 한계점이 있으나 그 혜택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돌아간다는 데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보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홍희덕 위원**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정부가 곧 시한이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보이는 점이 있는데 그 결과는 고용을 명목으로 말씀드린 대로……

마치겠습니다.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 주는 것이 될 것이다, ‘고용’이 아닌 ‘투자’로 묶어두게 되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핵심을 ‘투자’가 아닌 ‘고용’으로 해서 고용창출세액공제가 되든 기존의 고용중대세액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아무튼 세제를 고용 친화적으로 바꾸는 일련의 세법 개정안이 지금 제출돼 있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세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홍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석호 위원입니다.

고용 증대에 따른 우리 정부의 각종 정책개발은 필수적이고요. 또 잘된 것은 아주 잘됐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장관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상생 효과에, 그런 부분에서는 고용의 증대 효과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지금 저희들이 제시, 국가고용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인력 육성, 채용, 활용 측면에서 모두 파트너십을 갖도록 하자 하는 걸 제시를 했고요.

○**강석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고용의 증대 효과는 크다고 볼 수가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아주 크고……

○**강석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참고로 그저께……

○**강석호 위원** 아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이 대기업들이 고용 상생 효과를 해치고 고용 증대에 따른 그런 많은, 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본다면 대기업에서는 노사 협의를 하고 단체협약을 하고 임금 협상을 하고 ‘이제 무교섭 타결이다’ 광고를 하고 또 하청 중소기업에게도 그것을 강요합니다. 이번에도 무교섭 타결하는 데는 어떤 인센티브 지급 등등…… 그런데 이것은 이면계약이 들어가 있어. 줄 건 다 주고 겉으로는 상생 효과다 하지만, 그러니까 하청 중소기업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앓이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차대조표, 재무제표를 본다면 엄청난 금액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비용이. 그런 부분에서 과다 임금인상 요인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우리 장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구체적인 기업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까마는 그런 사례……

○**강석호 위원** 이 부분은 보편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런 사례 등이……

○**강석호 위원** 저는 정책적인 부분도 입안을 해서 기업들에게 많은 규제 완화를 하고 끝아가는 부분도 좋지만 현장 안에서 이런 부분들도 파헤쳐 가지고 실질적인 상생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아까 답변드린 ‘넘치는 것을 자르고 모자란 것을 채운다’ 하는 같은 입장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강석호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고용창출을 어떻게 시키느냐? 많은 개인 자영업, 법인이 설립을 하고 또 설립하는 데는 각종 규제 완화를 해줘서 활성화를 시키고 그렇게 되면 전문인력들 고용창출, 또 그렇게 돼서 사업 극대화 이렇게 되면 최소한의 고용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고용창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동의합니다.

○**강석호 위원** 기획재정부차관께 하나 묻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일자리 대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 해결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예를 보면 지금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으로 대형 종합병원으로 간호사가 몰리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강석호 위원** 또 중소병원들의 인력난이 심각하고, 또 중소병원들은 기존 확보된 간호사 이탈을 막기 위해서 임금인상을 하고도 간호등급제 최하인 7등급에 분류되어서 입원료 수가를 삭감당하고 있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제도개선 방안에는 정부가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혹시 고용부에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석호 위원** 그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들 아까 보고드린 방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유휴간호사가 지금 한 9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장롱 속에 면허를 넣어 놓고 실제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2~3만 명 가까운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휴간호사 분들이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제로, 그분들은 시간제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제로 일하시는 걸 알선을 적극 해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간호사분들을 쓰는 병원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MOU를 체결하고 또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간호사들을 뒤편에 되는 기준 자체가 전일제 기준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아까 짧은 보고에 생략이 됐습니까만 정원관리기준 자체를 전일제로 할 것이 아니고 시간 단위로 하는 방안 등으로 개편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강석호 위원** 또 하나 예가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병원들이 일자리를 열어 놓고 있지만 간호사가 없습니다. 일하려는 간호조무사는 대기하고 있는데 정부의 제도가 가로막고 있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현실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또 병원의 간호인력난이 심각한데도 충분한 대체인력풀을 갖춘 조무사들을 활용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는 간호사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차 간호조무사협회하고도 함께……

○**강석호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지방에도 보면 간호조무사들이 다 서울로 몰립니다, 전자에 설명했듯이. 또 간호사협회의 어떤 이해적인 관계 또 보건복지부 쪽의 안이함도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이게 우리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자리 만들기 기초의 취지가 제대로 살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반감을 한번 표해 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방안에서는 가장 큰 해결책이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에 포함시켜서 또 적정 수준의 간호관리료 가산을 인정하거나 아예 간호관리료가산제, 즉 간호등급제를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일선으로 간호조무사 또 장롱에 놓고 있는 라이선스를 갖추신 분을 현장으로 끌어 들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병원 간호사인력난 해소라든지 또 고용창출 증진에 대한 방안을 장관께서 유념하셔서 가지고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강석호 위원** 해결은 될 것 같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12월 안에 최소한 일단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시간제로 근무할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드리는 문제는 MOU 체결 단계까지 이를 것으로 조간만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간호조무사협회하고도 추가로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등의 직역, 또 이해가 갈리는 게 있어서 보건복지부 등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갈등이 없도록 원만하게 조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걸** 강석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민주당 광주 북구를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지금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33.3%로 10월 말 현재 조사되었습니다.

○**김재균 위원** OECD 평균이 12.34%인데 우리는 33.6%로 3배나 높습니다. 그것도 임시·일용 근로자를 제외했을 때 이야기고 임시직까지 포함시키는 노동계 통계를 살펴봤을 때는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49.8%에 이르러서 정규직 비율인 50.2%와 거의 대등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급여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급여 차이를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근속

연수라든지 직종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보면 한 14%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14%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규직 월 평균 급여가 266만원, 비정규직은 123만원,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지구상에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고 임금격차가 심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장관, '88만 원 세대', '4천원 인생'이라는 책 읽어 보신 적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 책은 읽어 보지는 않았습지만 핵심적인 내용이랄까 이런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88만 원은 우리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 4000원은 시급제로 일하면서 아르바이트생과 대다수 비정규직의 비참한 처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4000원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어요. 우리가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처럼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일자리 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대상이 되어야겠지요.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오늘 장관께서도 소개를 하셨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보고 내용 중 국가고용전략 2020이라는 것의 내용을 보니까 실상은 비정규직 양산 대책에 불과하다 하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결국 비정규직 늘려서 통계상 고용률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나쁜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그걸로 눈속임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9페이지를 보니까 '고용규제 합리화'라 해서 오늘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자세히 보면 파견업종과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이 2년이지요, 사용예외 대상을 확대하겠다 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법적, 제도적으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비정규직을 전면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의 다름이 아니에

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경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임기 종반에 내놓은 일자리 정책이란 것이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아무런 철학과 대안도 없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완전히 포기한 정부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기 포기한 대통령, 즉 일포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간사로도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선공약으로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고 약속하신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300만 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올 상반기까지 일자리가 오히려 20만 개 줄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지는……

○**김재균 위원** 공약을 지키려면 앞으로 남은 2년간 32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비정규직 양산해서 해마다 일자리 24만 개 만들겠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달에 G20 정상회의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노동계 대표단에게 '나도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래서 나의 꿈은 고정적인 일자리를 얻어서 꾸준히 월급을 받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누구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과 비정규직의 애환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작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이 비정규직 확산 정책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 가면 대한민국이 비정규직 천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옥이 되어 있겠지요. 이에 본 위원은 비정규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고용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내걸면서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서비스산업 선진화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야말로 가장 논란이 많고 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본 위원의 눈길을 끈 것이 파견직 업종을 확대한다는 내용과 직업소개 수수

료를 자율화하겠다는 내용이예요. 어제 파일로 본 위원이 내용을 이렇게 받았는데 오늘 보고서에는 또 빠져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는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니까 수수료 상한선을 폐지해서 민간직업소개소를 확산하겠다는 것인데 원래 실업해소나 일자리 알선, 직업소개 같은 업무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일차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간직업소개소를 사실상 장려하는 이 내용은 국가가 해야 할 실업해소와 직업알선 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겠다는 그런 내용이예요.

게다가 본 위원이 과건직 업종 확대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과건직이 확대되면 그만큼 직업소개소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두 가지 대책은 마치 수요와 공급을 짝맞춘 것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불안한 과건직들이 직업소개소를 전전하는 동안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예요. 결국 이 같은 내용이 현실화되면 정부의 책임방기를 통해서 민간직업소개소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돈벌이 수단이나 제공하는 꼴 아닙니까? 이것이 올바른 일자리 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여러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한계와 부작용이 명백한 이러한 내용들은 즉각 백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왜 오늘 보고서에는 빠졌는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이렇게 어제는 파일로 해서 왔는데……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우리 보고서가 아니고 아마 기재부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김재균 위원** 예, 기재부.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 한번 경위를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 답변을……

○**김재균 위원** 지적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너무 많은 것을 질문해 주셔서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격차를 축소하고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직업으로 늘리려고 한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근로자들 비정규직화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억압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 신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정규직 비율이 지금 33.3%인데 차츰차츰 줄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매년 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OECD하고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우리처럼 기준을 시간제 근로자들까지 다 잡는다면 선진국도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말씀 올리고.

임금격차가 있는데 제가 아까 14%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16%네요. 그런데 이게 성이라든지 연령,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을 감안했을 때 동일한 남성, 여성, 근속연수 이런 것 등을 감안했을 때는 16% 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건업종이 3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조정하려는 것은 32개로 되어 있지만 그중의 일부 업종은 전혀 수요가 없어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고 반면에 최근 몇 년 동안 수요가 급증한 서비스 분야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쪽을 추가해서 전체로는 개수를 32개를 유지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이고요.

기간제 2년 사용기간 제한도 2년의 근본 틀은 유지하되 선진국 경우처럼 신설기업이라든지 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2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외를 확대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고.

지난 2007년에 기간제법이 정해진 이후로 어느 정도 순기능을 발휘했다고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규직 비율이 차츰차츰 높아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또 최근에 우려되는 것은 이 법으로 인한 또 다른 측면,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어서, 예컨대 1년 6개월 또는 2년이 된 근로자들 가운데 해고가 되거나 계속고용이 되는, 불법 상태지요, 비율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줄어들고 이들 가운데서 그냥 해고가 되거나 계속 고용 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서 어쨌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직업소개 수수료는 지금 ILO 기준이라든지 국제 기준을 보면 원래 구직자로부터는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우리는 구직자·구인자 양측으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법을 고치는 핵심 요지는 구직자로부터는 받지 못하게 하되 구인자, 즉 기업한테는 수수료 상한선을 없애서 좀 더 다양하고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부담은 줄어들고 기업들의 경우는 자기가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이 높아진다면 수수료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 기준에 입각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럼 직업소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생산요소 가운데 사람도 있고 자본도 있고 기술도 있고 기계도 있고 할 텐데 자본 같은 것은 중개하는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업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사람의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소개하고 중개하는 이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해서 심지어 이력서를 300장씩 써도 아직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했다 하는 그런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중개하는 이런 기능도 산업의 차원에서도 육성을 한번 적극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균 위원** 늦었는데요,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대상을 업종·규모별 실태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공론화에 붙이려고 합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그런 계획들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김재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 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너무나 큰 주제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는 참 면목이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도 있었고 두 분께서, 고용노동부장관님 또 재정부차관님께서 방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은 그런 차원의 문제보다도 어차피 소위도 구성되고 한다고 하니까 정책 재연성 또 자료 요구성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두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크게 우선 하나 고민이 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의 이유를 분석하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80년대 이후 중산층과 화이트칼라 일부를 제외해 놓고는 화이트칼라 대부분, 블루칼라들에서 실질소득이 정체되어 있었던 점, 이 점이 계속 미국 경제성장을 악화시키니까 금융에 오버 레버리징과 과잉 파생상품화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더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적절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유지와 고용의 양과 질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큼 그 나라의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부분이 없더라는 문제의식입니다.

즉, 아까 우리 박재완 장관님께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비정규직 비율이 그래도 조금씩 줄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라고도 연관이 되어서 비정규직 위주로 많이 해고가 되고 했던 것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반드시 나아지고만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컨대 문제의 핵심은 수출과 내수 간의 격차가 아주 심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기회를 갖고 있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에도 격차가 심해져 있고 노동시장 내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을 포함한 다양한 단층현상들이 생기고 있고 대기업·중소기업 간에도 단층현상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영원한 숙제인 영세자영업부분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일자리정책을 논의하는 이 고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큰 뷰(view)에서 큰 고민의 큰 틀에서 공유를 하면서 정책적인 논의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많이 강조를 하

습니다.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 경우에는 뭔가 산업정책적인 차원에서 고용이 창출될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데 저는 국회가 국민적인 어떤 일자리 문제에 대한 컨센서스(consensus)를 높이기 위해서도 왜 그런 비정규직이 그러면 그동안 과도하게 늘어 왔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예를 들면 일부 대기업 강성노조가 있는 곳에서의 노동이 너무나 경직돼 있고, 한번 취업하면 평생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고용이 보장되는 그런 나쁜 단체교섭의 사례, 또 그것이 하청업체에 이어져서 하청공장이 나빠지는 사례. 그러니 또 사용자 중에서 일부는 할 수 없이 그 경직된 부담을 감수하기가 어려우니까 비정규직이든 탈법적인 파견이든 이런 문제들로 반복되어 오는 현실도 저는 함께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정부가 그런 측면에서의 노동의 유연성이 보다 좀 확대되는 것을 강조하시려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에 대해서 차별 해소를 위한 어떠한 적극적 정책이 있다는 비전을 보여 주고 국민을 믿게 하고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의 틀이 서는 것이고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 강화될 수 있는 여러 거시정책과 중기정책들이 잘 짜여진 가운데 마이크로(micro)하게 문제점 있는 지점들을 고쳐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저로서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없고 이런 측면에서 어떤 표를 의식하는 접근보다도 오히려 좀 더 국민들한테 문제의 정곡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정부의 정책을 전반에 걸쳐서 정말 비전으로서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차원의 노력 없이는 계속적인 사업장 차원의 분규라든가 이익 당사자 간의 분규 때문에 고용 창출을 위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전이 안 되는, 딱 그냥 서로 꼬여가지고 네 탓 내 탓 하다가 끝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큰 우려를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획재정부나 우리 노동부 양 부서에서는 솔직하게 다 드러내야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사실 이런 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일자리가 과연 되겠습니까? 거꾸로 정부는 이런 점이 부족했으니 어떻게 안심시켜 가면서 갈테니까 큰 틀에서 또 어떤 좀 구조 개혁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용해 달라는 이런 솔직

한 이야기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뭐 해 가지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선 정부가 좀 솔선수범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선 일자리 창출 예산에 대해서 성과분석 좀 제대로 하십시오. 이제 좀 제발 내년에는 제대로 해서 실효성 없는 예산 과감하게 털어 내서 기관이기주의, 부처이기주의를 털어 내기 위한 과감한 내부개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또 사업장에 대해서 비임금성 지원정책을 강화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것은 해 보니까 말이 되더라, 어떤 것은 돈이 들어가는데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 돈을 제대로 지원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 사업장 근로자에게 비임금성 지원정책은 그러면 실패가 어떻다 이것 제대로 좀 밝혀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기관·공기업·공공기관 중에 정규직화가 가능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규직화를 선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연구인력들입니다, 연구지원인력들. 장비를 관리하고 실험 실습을 하고 하는 정부출연기관에 있는 인력들을 그동안 공기업, 지난 정부부터 새 정부에 이르기까지 박사급 핵심 연구인력의 기득권을 지켜 주기 위해서 연구지원 인력을 전부 비정규직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에서 뭐 제대로 합니까? 전부 공무원시험 치르려고 대기하고 있지요. 이런 문제들도 저는 해결해야 되고.

아까 장애인, 취약 계층의 고용기준 준수 문제 등 몇 가지 정부가 솔선수범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부가 솔선수범하겠다는 신뢰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소위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이게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쁜 위원들과 우리 위원회의 역량만 가지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사회적 협약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부처가 중심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자료를 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동안 고용과 관련된 통계들 중에 그들에 해당되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잘돼 가고 있다 말고 실제로 좀 나쁜 쪽 통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노사정 모두에게 요구할 사항들이 좀 있

거든요. 그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안에 대해서 쟁점이 있습니다. 가령 노동시간,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아니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의 유연화와 안정화를 어떻게 좀 결합시키는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데에서 쟁점이 있는 것이고요. 대기업·중소기업 문제에 관해서도 근본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해결되고 그것은 또 너무 심하다 뭐 이런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방안에 대해서 쟁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서치 자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정책제안의 내용과 그 핵심적인 코멘트 자료, 용역 자료 핵심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요컨대 창업 파트, 내수와 수출,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 요즘은 특히 네트워크를 쥐고 있는 쪽과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쪽의 격차의 문제, 과불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복지·노동의 삼각 연계망을 강화하겠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그 정책들 중에 성공적인 것은 뭐고 잘 안 되는 것은 뭐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의 문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큰 문제, 그다음에 고졸·전문대졸로 가는 이런 쪽의 트랙에 대한 정부정책을 나름대로는 제대로 알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실효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제안들도 소위 작업 때 참고가 되도록 좀 가지런히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큰 틀에서만 말씀드려서 자세한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요, 간단한 답변만 두 분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답변드리고요.

일자리 사업은 여전히 좀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사업 202개를 올해 134개로 줄였다가 예산 과정에서 151개로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더 내실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연구인력 관련해서는 이번에 청년실업 ‘1차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에 R&D 인력을 많이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거와는 별개로 연구지원인력의 정규직화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늘 통계, 대안에 관한 쟁점들 백업 머터리얼 (backup material) 등은 저희들이 충실히 준비를 해서 소위 논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1차관님 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고용 문제 전반의 문제를 폭넓고 광범위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앞으로 소위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라든가 정부의 대응방안의 정립 이런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김성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장이 소위와 관련해서 좀 당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배은희 위원** 청년고용 문제의 원인 해서 1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원인을 잘 분석해 놓으셨거든요. 근로조건 격차, 미래 비전의 불확실성, 명성의 외부효과 등에 기인한 중소기업 취업 기피가 심화된다고. 그래서 많이 일하고 급여는 적게 받고, 원인을 잘 파악하셨는데 대책을 보면 이 원인을 해소하는 대책이 아니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답변을 드릴까요?

○**배은희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일 자리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도 사람을 못 구합니다. 아시죠?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배은희 위원** 그 원인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의 지원을 지금 기업에다가 주지요? 기업에다, 그 임금의 몇 %를 기업에 주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요?

○**배은희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기업에 주는 것도 있고 청년한테 주는 것도 있고요.

○배은희 위원 직접 주는 게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따로 그게 아주...
...

○배은희 위원 얼마나?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빈 일자리 같은 데 가는 경우는 180만 원까지.....

○배은희 위원 연? 한 달에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1년.

○배은희 위원 1년에 180만 원이죠? 이 평균 격차가, 임금 격차가 지금 700만 원이예요, 그렇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그러면 이거를 메워주는 걸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에다 주지 말고.....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답변드릴까요?

○배은희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가 이것 보고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앞에 문제점 이런 것은 전반적인 것이고 뒤에 15쪽부터 나온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는 '1차'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3차에 걸쳐서 발표하게 될 건에 1차는 우선 급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엔 추가로 확실하게 어떤 분야에서 언제 얼마만큼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손에 잡히게 제시한 것이 15쪽 이하가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 등은 앞으로 발표될 2차·3차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에.....

○배은희 위원 저는 이게 더 급한 것 같거든요. 중소기업에 당장 사람이 없는데 기업에 주는 것은 유인책이 안 됩니다. 중소기업에 가면 기업은 1700만 원 주더라도 정부에서 700만 원 더 보조해서 내가 대기업 가서 받는 것만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왜 안 가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명성의 외부효과 이것도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차별 있는 것 아니죠?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뭐 신용도에 따른 차별?

○배은희 위원 예. 차라리 그런 것들을 없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에 가서 그 기업이 망하면 내 일자리가 없어진다가 아니라 그 기업에서 배운 나의 커리어(career)가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을 해주셔야 일자리 불안이라든지 고용의 불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중소기업을 가는 게, 회피하는 게 해결이 되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배은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대책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답변을 혹시.....

○배은희 위원 뭐 2차·3차 하신다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모아서.....

○배은희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래서 기업에다 그냥.....

○배은희 위원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배은희 위원 그게 계획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배은희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러니까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이른바 말하자면 기업이 사실은 편법으로 그 돈을 그냥 활용하고 이게 청년 실제 고용에는 별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데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 등이 있어서 계속 고용 유지가 되면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바꿨고요.

○배은희 위원 아니, 기업에 주지 말고 직원한테 주라니까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배은희 위원 그렇게 좀 한번 검토.....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고용여건을.....

○배은희 위원 아니, 기업에 자리는 만들어 놔는데 사람을 못 구한다니까요. 지금 자리 못 만드는 기업을 자리 만들도록 하는 게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요, 자리를 만들어 놔는데 일자리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나중에 제가 따로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할 말이 워낙 많아서.....

○배은희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졸자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이 부분이요, 지금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반드시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산업기능요원제도 연장 이것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것은 이미 됐습니

다.

○배은희 위원 검토가 아니고 확정됐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사실상.

○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김성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연구보조요원 정규화하는 거 이거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조요원뿐 아니라 연구원들 위촉 연구원으로 다 있거든요. TO가 안 늘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배은희 위원 그리고 그 R&D의 성과를 어떤 제품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로만 보시지 마시고 인재양성도 R&D의 커다란 효과로 보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렇겠지요.

○배은희 위원 아시죠?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배은희 위원 그러면 R&D 지원 이게 돈만 늘린다는 게 아니라 비용 항목도, 쓸 수 있는 항목도 인건비로 전환하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TO 늘려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비, 제가 지금 교과위원회에서 장비 공동 활용방안도 보고 있는데요 장비를 하나 더 사는 것보다 있는 장비를 잘 활용해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예산 절감이며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선제조건이 장비를 관리하는 인력이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력의 TO가 없고요. 그 연구비에서 장비를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줄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 걸 기재부에서 다 그 세세사항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 R&D 지원, 그냥 이렇게 돈만 늘리고 뭐 세액공제 해 준다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이거랑 일자리 창출이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지금 여기 일자리특위인 걸 좀 감안하고 그러한 것까지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R&D 투자세액공제 확대가 이게 3~6%에서 20%, 이것 대기업에 대한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아닙니다.

○배은희 위원 중소기업은 이것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기업 구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배은희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중소기업의 확대는 훨씬 작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아니요, 중소기업이 더 높습니다. 중소기업 확대가 더 많습니다.

○배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이, 중소기업 원래 얼마였다가 얼마로 됐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중소기업이요? 3~6에서 중소기업만 가장 높은 20%까지 받을 수 있고요.

○배은희 위원 그전에 얼마였는데 25%까지 됐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3~6%였습니다.

○배은희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보고받으십시오.

차관님, 잘 현황을 좀 확인하시고요.

아니거든요? 이건 대기업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오도하는 데이터를 안 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혹시 아까 답변 못 드린 것 위원장님, 간단히……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저도 좀 답변을 드리고, 뭐 한마디도 못했는데요.

○위원장 이종걸 차관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연구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어려운 점이 그런 점 아니겠습니까?

공공부문에 효율화하고 선진화하고 그리고 비용을 절약하는 구조로 가져가야 하는 문제와……

○배은희 위원 아니, 지금 R&D 예산을 인건비로 쓸 수 있게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아니, 글썽 그것을 뭐, 뭐 인건비로 쓸 수 있는 R&D 예산을 자꾸 늘리면 또 실체를 위한 예산이 또 부족해질 수가 있으니까……

○배은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보고를 일자리 특위에서 뭐 하러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글썽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요.

○배은희 위원 아니, 일자리 안 느는 R&D 예산 증액을 여기서 뭐 하러 보고를 하시냐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일자리 안 느는 R&D라는 게 무엇을……

○배은희 위원 아니, 일자리특위에 와서 R&D 예산 늘리면서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고 무슨 관

계가 있는지, 그걸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계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유념을 하고요.

다만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만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걸 예, 장관님,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들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비어 있는 일자리에 사람을 못 채울 때는 가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기업이 고용하게 되면 기업한테 돈을 줍니다. 장애인, 여성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명성에 의한 외부효과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에 근무함으로써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뭐 결혼을 잘못하겠다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뽑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컨대 지난 월요일 날 총리님 참석하신 가운데 대기업하고 그 협력업체들하고 동반 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협력업체가 70여 개가 함께 참여해서 이름을 들으면 삼성 협력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아, 이게 같이 협력업체구나 하는 그런 효과로 해서 2500명을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더 확대하고, 할 일은 여러 방면에 걸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좋은 제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그리고 위원님,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 R&D 지금 예시로 든 것 대기업은 맞습니다. 맞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R&D 당기분 25%를 30%까지 늘렸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늘렸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배은희 위원 25에서 30으로 5%밖에 안 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거라니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아니……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 30%가 제가 알기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걸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위원장 이종걸 사실 중소기업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다 많이 알려져 있는 일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단 주질의는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5분 정도 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예, 우선 5분 하겠습니다.

아까 장관님이 제가 실태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실태조사를 모욕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장관님이 지금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대법판결과 같은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을 실태조사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구제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실태조사가 곧 이런 편법적인 고용관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동부 관료의 조사 결정 말 한마디가 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이걸 함께 조사하자,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조사하면 형식적이고 짜맞추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조사 대상자가, 당사자가 조사 주체가 될 수는 없지요.

‘누구든지 자신이 자기 이해관계를 재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로마의 법언이지 않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제 얘기를 좀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실태조사를 같이 하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거부했지요, 일단 지금 장관님 말씀의 입장처럼.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이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당연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니지요.

○최영희 위원 그런데 차별정책을 없애겠다고……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니, 자기가 비정규직인지 불법 파견……

○최영희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사용자도 입회하에 조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러면 자기가 불법 파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조사하고 자기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그건요, 당사자……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조사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사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통해서 그럼 입회하에 같이 하자, 사용자 측 입회 그리고 노동자 측 입회해서 같이 하자라고……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게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게 해서……

아, 그런데 그걸 무조건 거부했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지요.

전수조사를 하고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주장을 내세웠지요.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걸 거부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공장의, 지금 노동부가 조사한 과정을 보면요, 하청업체 일곱 곳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 회사별 5명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원들이 회사 작업복을 입고 들어가서 하청업체 대표가 선발한 사람들 5명씩만 조사하고 그리고 문제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런 사실과 다릅니다.

그건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이미 발표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노동부가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이미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사측이 선정한 근로자만 조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정하게 근로자를 선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그리고 그 해명자료를 저희들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차별정책을 없애겠다는 그런 애정과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더 논의하고 또 다른 공청회라도 한다든지, 이것이 좀 옳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노조가 거부할 것 뻔히 알면서 그냥

들어갔다는 것, 이걸 사실 어찌 보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저희가 네 가지 트랙으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자, 다른 질문이 있으니까요. 좀……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래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노사정위원회에 의제별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한편으로는 실태 점검을 진행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의법 조치를 하고 고발도 하고 할 생각이요 일부는 그렇게 진행했지 않습니까? 나머지도 추가조사를 하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또 좀 더 강화, 대법원 판결 지금 그 취지에 맞게 좀 더 보장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최영희 위원 지금 그러면 현대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 질문이 끝나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최영희 위원 기재부차관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회적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임신, 출산 이게 곧 사직입니다. 대체인력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또 수조 원의 일자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평가가 없습니다. 아까 김성식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부에서 하고 있는 새 일 센터가 있습니다. 내년엔 100개로 새 일 센터를 더 늘리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이 교육을 통해서 나가서 5일 일 하고 쫓겨났는지 한 달 일 하고 쫓겨났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100개로 늘리겠다고 하는 식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조사를 할 수……

.....
 있는 그런 예산을 병행해서 적어도 1년이 완벽하게 끝났다라든지 아니면 2년이 끝났다면 그 추적 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같이 내려보내 줘야만 우리들도 상임위에서 평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걸 노동부 책임인지 기재부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예산을 성과 평가해서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임신·출산 문제는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임신·출산 문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 대체인력이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

○**최영희 위원** 사회적일자리, 여성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사회적일자리……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이걸 제가 한번 좀 파악을 해서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영희 위원** 저한테 보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이것은 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아까 말씀하신 현대자동차 지금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정부가 할 거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이 문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가지고 온 그 사안의 확정 판결이 나면 그 취지에 따라서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태가 급박하기 때문에 그전이라도 첫째는 고용노동부가 다른 25개 업체에 했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어떤 실태 점검을 거쳐서 결론을 내릴 부분은 그 판결 나기 전까지라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서로 교섭 상대방은 아니지만 현대자동차와 또 하도급 업체 그리고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 또 필요하다면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근로자들 등등 해서 뭐 4자가 5자가 됐든 6자가 됐든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런 대화를 한편으로서는 하면서도 공장이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소망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생산시설이 점거되어 있는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제도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촉발한 여러 가지 또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필요하다, 거기서 나온 그 결론에 따라서 법제가 개선할 게 있다면 필요하다면 개선을 하고 또 그때까지는 저희들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해서 가이드 라인을 별도로 좀 더 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올해 29개 업체를 상대로 실태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번에 점검하였을 때 나온 IT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점검에서 빠진 유통업종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그 실태조사를 좀 더 강화하겠다 하는 등의 복합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고 나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됐습니까?

홍희덕 위원님, 간단히 하시지요.

2시 본회의가 지금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도, 그래서 간단히 해 주시면……

○**홍희덕 위원** 예.

박재완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홍희덕 위원** 대법원에서 현대차와 관련해서 지금 고법으로 파기환송되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많은 노동법 학자들, 대법원 판결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 판결이 장관님 말씀대로 두 사람에게 대한 판결 아니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의 판결과 동일하게 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또 장관께서 나머지 1900명 소송 제기했으니까 그 사람들 판결 다 받아 볼 때까지 또 모든 정의행위, 교섭, 불법이라고 할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원론적으로는……

○**홍희덕 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홍희덕 위원**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으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 가지고 고법에서 어쨌든 뭐 확정이 되면 확정된 그 판결의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취지는 존중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그 판결이 122개 사내 하도급 업체 가운데 한 업체에 근무하는 두 사람의 2005년……

○**홍희덕 위원**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으로 듣고요. 마치고요.

‘내 일 일자리 프로젝트’ 좀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프로젝트에서 탈수급, 그러니까 수급을 줄이는 그런 계획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기초수급자 탈수급 논의는 고용분야 아닌 복지분야의 의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일을 통한 탈수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아니, 물론 일을 통한 탈수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겠다는 취지로 써 놓은 겁니다.

○**홍희덕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7만 명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28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28만 명 가운데에서도 좀 더 좁혀 가지고 정말 근로능력이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높고 일할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홍희덕 위원** 장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논의의 핵심이 어떻게 해서 기초수급자를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시킬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기초수급자를 탈수급하게 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앞부분에 초점이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결국 기초수급자들을 근로능력과 자활대상자로, 그렇지요? 분류하겠다는 것은…… 희망근로 등 비정규 일자리로밖에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지 않습니다.

○**홍희덕 위원** 취업 중인 수급자에 대한 탈수급 계획을 수립한다, 탈수급 계획 미이행 시 수급액 단계적 감액을 검토한다, 이것은 고용에서 다룰 부분이 아닐 뿐더러 강도 높은 무차별 선별 복지를 시행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총리가 매번 인터뷰 때마다 ‘선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 하시는데 이것도 그 일환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위원님, 이렇게 좀 저희들한테…… ‘아, 저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저 사람들도 하여튼 열심히 해서 뭔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 보려는구나’하고 신뢰를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왜 그분들한테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하겠습니까? 같은 국민인데,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직업훈련이라든지 기술교육 같은 거, 이런 거를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에서 탈피해 가지고 당당한 일꾼으로 그렇게 태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홍희덕 위원** 장관님, 이번 계획과 관련해서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 부분은 지금 관련 부처들하고, 복지부……

○**홍희덕 위원** 그래야 그 내용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몽뚱그러서 그냥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내용만 나오니까 우려가 돼서 그렇게 말씀하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걱정하시는 부분 잘……

○**홍희덕 위원**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무슨 장관님 일하시는데 나쁜 사람으로 본다 고 하는 표현은, 그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를 저희가 잘 알겠고요. 지금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 계획이 나오면 바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유념하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근로를 강제하거나 수급액에 대한 단서조항을 함부로 달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홍희덕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최영희 위원님, 간략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최영희 위원** 4대강 사업 고용영향평가 지금 하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최영희 위원** 그런데 그 자문단 운영…… 연구진 구성 및 자문단 운영, 이거를 아주 객관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요, 고용영향평가 연구진이 아홉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직간접적으로 4대강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여덟 명에 달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다섯 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한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사실 여섯 명이 고요. 또 세 명의 교수들이, 외부 인사들이 있는데 이분이 경부운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또 4대강 살리기 민관협의체 공동 준비위원장인 교수님이 한 분 들어가셨고 또 경인운하 건설에 찬성하신 교수님도 한 분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정한 연구진이 구성되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분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최영희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5분밖에 없으니까 좀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어떤 결과물을 내놔도 지금 그 국론이 상당히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가에 대해서는 누가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 그거를 발표하셨어요. 09년 1월 6일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에서 총 96만 개, 또 11월

5일에는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방안에 대해서 고용유발 효과가 118만~147만 명 또 2010년 9월 1일에는 총 230만 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뭐 이런 것들 죽 해 가지고……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에서 11만 개, 10월 19일에는 2020년까지 방위산업 분야에서 고용 5만 명 추진, 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어쨌든 사실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파악 못 하고 있지요.

이런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또 2020년까지 뭘 하겠다, 이런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잇을 만하면 정부에서 자꾸 수십조 단위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 애드벌룬 띄우기라는 이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띄워 놓은 그 애드벌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검토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라도 좀 제대로 보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용전략 2020’ 고용률 70% 목표 달성, 이거인데요.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그 통계수치를…… 고용률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OECD 방식으로 바꾼다고 했다가 ILO 기준으로 했다가……

지난번 3월 달에 우리 첫 번째 회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의에서는 ILO 기준으로 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20 이것 발표하실 때에는 또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한다면 15세에서 64세 기준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통계 마술로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과주의식 그런 단면을 보여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지난번 기재부 일자리 보고, 3월 달에 보고한 것 보면 역시 ILO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 또 통계청도 글로벌 스탠더드 ILO 권고안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 이러면서 업무보고를 했고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도 저희들이, 12월 1일 날 이니까 어제지요. 어제 들어갔는데 역시 고용률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ILO 기준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OECD 기준으로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정부가 똑같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방식으로 한다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에 ILO 기준으로 한다면, 정부 목표대로 하면 임기 종료시점의 고용률을 보면, 15세에서 64세로 하면 64%거든요. 12년도에 64%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0.1%p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고용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분모를 바꾸어서 2020년에는 70% 목표,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좀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통계수치를 쓸 것인가…… 너무 빨리 해 가지고 저도 헛갈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4대강은 고용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자문위원이나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마는 지금 질문하신 대로라면, 고용정보원에서 5명인가 들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참고로 예비타당성 평가 이런 거를 KDI의 공공정책센터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 예산 사업의? 그것처럼 이 고용영향평가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문기관이 없는데 내년에 전문 수행기관을 지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국가고용정보원이 아마 그런 쪽에 제일 노하우가 있다고 보고 선정할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인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찬성하는 사람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결론이 중립적으로 나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좀……

○최영희 위원 재고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넣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용부가 다 한 일은 아닙니다. 마는, ‘녹색일자리 구십몇 만 개 만들겠다.’ 등 이런 각 부처가 발표한, 2008년 정부 출범 이후에 발표했던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의 실적을 좀 점검을 하고…… 이게 발표만 장밋빛처럼 하고 제대로 실천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

은 상당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분별하게 발표가 되고 사후에 점검 같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 통계 문제인데요. 결국 고용률 전반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가 차용하고 있는 기준이 OECD 기준에 비해서 좀 과소평가되는 그런 약점을 지니고 있고, 청년 고용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차용하고 있는 기준이 OECD에 비해서 과대평가되는 그런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이 선진국보다 미흡해서 65세 이후까지 지표를 넓히는 게 좋겠다는 고려와 또 청년들은 군 복무 및 대학 진학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입직 연령이 선진국보다 늦기 때문에 29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유용성의 관점에서 채택이 되는 것이고 국제기준과 좀 병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청년고용 말고요. 청년고용 말고 그냥 전체적인 고용률이……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말씀하신 70% 그 목표는, 65세 이후 100세 넘어서까지 전 연령으로 했을 경우에는 70%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또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2020년이 되었을 때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완비가 되어서 64세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심층 논의를 거쳐서 그런 기준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ILO 거는 안 쓸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지 않고요. 당분간 병행해 가다가 2020년에 이르면 OECD 기준으로 완전히 통일이 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둘 다를 병행해서 쓰기는 쓸 겁니다. 제가, 정부가 뭐 속이려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현 정부가 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정부가 이렇게 기준 2개를 좀 달리 차용해 왔다는 점…… 너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걸 차관님, 뭐 말씀하실 거는 없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대한 일자리창출 정부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오늘 일자리창출 방안에 관한 많은 질의를 해 주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조금 무리하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재완 노동부장관과 임종룡 기획재정부제1차관께서 이렇게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회적 협약안작성 소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이번 국회가,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일자리만들기 특별위원회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의답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고용노동부장관님 그리고 기획재정부 차관님께서 소위가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자료들을 좀 잘 보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소위 구성에 있어서는, 소위의 결과는 협약안인데요. 거기에는 정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구성해서 협약안을 만들기까지의 여러 가지 노력이 좀 필요한데, 오늘 질의 과정에서 나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 지금 근로자들의 강력한 요구안들 이런 것들이 협약안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될까 이렇게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 깊은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오늘 구성한 사회적 협약안 작성 소위원회 결과 등 필요한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 일자는 양 간사님 협의를 거쳐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이 중 결 정 태 근 정 희 수 최 영 희
홍 희 덕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국	경	북
전 문 위 원	김	광	복

○정부측 참석자

고용노동부				
장	관	박	재	완
고 용 정 책 실 장		엄	현	택
노 동 시 장 정 책 관		이	재	홍
인 력 수 급 정 책 관		임	무	송
직업능력정책관직무대리		정	지	원
고 용 평 등 정 책 관		권	영	순
고용서비스정책관		나	영	돈
기획재정부				
제 1 차 관		임	종	룡
차 관 보		강	호	인
정 책 조 정 국 장		이	석	준
공 공 정 책 국 장		임	해	중

○출석 위원(13인)

강 석 호	김 성 식	김 용 구	김 재 균
박 준 선	배 은 희	성 윤 환	윤 석 용